



## 즉시 사용

비 고	*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# 공동배포 : 해양수산부, 행정안전부		
답 당	<총괄>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		과장 서영석, 서기관 조상언 (044-200-2056, 2057)
	연안선박 안전관리	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	과장 최종욱, 사무관 엄기호 (044-200-2252, 2241)
		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실	과장 이수호, 서기관 권영규 (044-200-5120, 5121)
		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	과장 채광철 (044-205-2048)
	지진방재 개선대책	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	과장 김규형, 사무관 고수웅 (044-200-2341, 2359)
		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	과장 박광순, 사무관 김재은 (044-205-5180, 5181)

## 매년 안전검사 실시 등 낚싯배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

- ▶ (낚싯배) 선장자격 취득요건, 운항기준, 안전장비 강화
- ▶ (연안여객선) 승선확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
- ▶ (연근해어선) 조업 어선 위치 확인 강화, 악천후 시 소형어선의 출항 기준 재검토
- ▶ (현장대응력) 긴급신고전화 접수를 지방해경청으로 통합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5일(목) 오전,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를 주재했습니다.

○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「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」과 「지진 방재 개선대책」을 논의했습니다.

\* 참석자 : 기재부·교육부·과기부·국방부·행안부·문체부·산업부·복지부·환경부·고용부·국토부·해수부 장·차관, 국조실장, 산림청·기상청·해경청장 등

◆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 (해수부·해경)

□ 정부는 영흥도 충돌사고(‘17.12), 여객선 좌초사고(‘18.3)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연안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.

□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낚시배·연안여객선·연근해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.

- (낚시배) 경험 미숙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2년 이상 승선 경력(현재 경력제한 無)이 있어야만 선장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, 운항기준\*과 안전장비\*\*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

\* 풍랑주의보 예비특보시 출항 통제, 영업시간을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제한 등

\*\* 매년 안전검사 실시(현재 5년마다 정기검사, 2~3년 사이에서 중간검사 실시) 및 13인승 이상 선박은 구명뗏목·선박자동식별장치 의무화

- (연안여객선) 운항관리자 부재로 승선관리가 미흡한 기항지(섬)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하여 운항관리자 증원을 추진하고, 승선확인 자동화 시스템(승선권 스캔)을 구축하겠습니다.

- (연근해어선) 조업 중인 어선의 위치 확인\*을 강화하고, 악천후시 소형어선의 출항기준도 재검토\*\*하기로 했습니다.

\* 위치확인 및 비상상황 전파 등을 위하여 연안에서 최대 200km 거리까지 LTE 통신이 가능한 연근해 해상통신체계 구축

\*\* 15톤이상 선박은 풍랑주의보에도 출항 가능 → 기준 톤수 상향

② 좁은 수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.

- 통항이 빈번한 좁은 연안수로의 수심·폭·교통량 등 통항여건을 조사하고, 소형선박 전자해도에 지도정보 외에 위험정보(항행주의, 사고다발 등) 표출 등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③ **해양사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,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.**

- 해경서별로 운영 중인 긴급신고전화 접수를 지방해경청으로 통합하고, 전문구조인력이 배치된 '구조거점 파출소'를 운영하는 한편, 출동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.
- 또한, **해양안전체험교육\*** 등을 확대하여 해양사고 발생시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\*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, 해양안전체험관 건립(경기안산, 전남진도, ~'20년) 등

- 해양관광·레저활동에 따른 국민들의 선박이용이 늘어나는 추세로, 정부는 **해양안전관리를 강화하고, 사고발생시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**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
#### ◆ **지진방재 개선대책 (행안부)**

- 오늘 회의에서는 이어 지난 포항 지진('17.11.15)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'**지진방재 개선대책**'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
- 이번 대책은 경주 지진('16.9.12)을 계기로 마련한 '**지진방재 종합대책**' ('16.12.16)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△내진보강 활성화 △신속·정확한 지진정보 제공 △지진 대응역량 강화 △이재민 구호 및 복구대책 개선 등 종합적으로 보완했습니다.
-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**4월 중 개선대책을 확정·발표할** 예정입니다.